

행안장관 “소비쿠폰, 취약계층 노출 없도록”… 현장 점검도

취임 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소비쿠폰·폭염 등 현안 논의
선불카드 ‘색깔차별’ 논란 시정 지시… 주민센터·전통시장 방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깔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불카드 권중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비쿠폰 지급,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윤 장관이 취임 후 중앙과 지방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집행과 관련해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소비쿠폰 지급 시 폭염에 대비해 실내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의 지급 누락이 없도록 하는 등 집행 과정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광주시가 소득 수준별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차별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청 서류와 지급 수단, 안내·홍보문도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그러나 소비쿠폰 선불카드 18만원(상위 10%+일반인)권은 분홍색, 33만원(차상위+한부모가족)권은 연두색, 43만원(기초생활수급자)권은 남색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익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폭염 등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폭염 대응에 있어 무더위 쉼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폭염 관련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하천과 계곡 내 무단·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철거·이동 등 신속한 정비도 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구조 및 응급 복구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끝으로 모든 공직자가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장소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또 인근 전통시장인 비단길 현장시장을 찾아 그간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시

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며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도왔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기운이 내수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대통령실 주도 광주군공항 해법찾기 한달… 6자협의체 첫 회의 관심

6월25일 타운홀미팅→대통령실TF→국정과제 채택
소음도·이전지역 보상 방안·이전부지 개발계획 검토
정부 3개부처·광주·전남·무안군 협의체 구성만 남아

이재명 대통령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이어 ‘국정과제 채택’으로 탄력을 받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찾기 한달이 돼가면서 정부 관련 부처와 광주·전남도·무안군 6자협의체 첫 실무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가 진행했던 ‘소음도 측정’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TF에 전달했다”며 “8월에는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려 실마리가 풀렸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주제로 타운

홀 미팅을 갖고 광주와 전남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통령실TF에 이어 6자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TF를 출범하고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했던 소음도 측정, 이전지역에 대한 보상 규모와 방안, 이전부지 개발계획 등 관련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또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자

료도 넘겨받아 분석 하고 있다.

대통령실TF는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 주관 부처 등을 규정하고 국토부·기재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으로 이뤄진 6자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 지난 7일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2007년 11월 국방부에 군공항 무안 이전을 건의한 지 18년, 2014년 10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정식 제출한 지 11년 만에 해법이 도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강기정 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는 정부 지원의 근거인 특

별법도 만들고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지만 무안군의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든든한 ‘보장인’이 필요했는데 대통령께서 보증인이 돼 주신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방부 주도로 무안지역에서 전투기 소음 측정 등을 해보자는 제안했다.

반면 대통령실TF 구성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까지 뒀지만 한달이 되도록 수면 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할 6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아울러 6자 협의체의 주축인 무안군이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서 광주시의 입장과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실TF는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을 전제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며 “군공항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전환되면 입지 요건, 군 작전 전개 가능 여부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병남 기자

“하늘의 중환자실 닥터헬기, 전남 동부권에 추가 배치해야” 송형곤 전남도의원 “야간운항 체계 마련 필요”

‘하늘의 중환자실’ 닥터헬기의 추가 배치와 함께 야간 운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은 전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병원 내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헬기는 단 1대뿐이다. 이마저도 주간에만 운영되는 비상식적인 구조 속에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 전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9.4%로 전국 평균(8.3%)보다 1.1%p 높다. 중증응급환자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19.2%에 달한다. 외상·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3대 중증응급환자 비율도 6.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정현 기자

그는 “닥터헬기 계류지인 신안 안압읍에서 여수·광양·고흥 등 동부권 주요 지역까지는 30~40분 이상 소요된다”며 “30분 내 현장 도착, 1시간 내 병원 이송이라는 골든타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닥터헬기 출동 요청 1133건 중 431건(38%)이 기각됐다. 특히 야간 시간대(오후 7시~자정)에는 단 한 건도 출동하지 못했다”며 “이는 닥터헬기 운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돼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닥터헬기는 단순한 항공수송 수단이 아니라 ‘하늘의 중환자실’로 생명을 잇는 중요한 의료 자산”이라며 “동부권에 한 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야간 운항 체계를 마련한다면 닥터헬기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생명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
창간을 축하합니다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